

제83호(2014. 1. 22.)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1. 2014년 농정 여건	3
2.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	7

감 수: 박성재 선임연구위원 02-3299-4238 seongjae@krei.re.kr
내용 문의: 황의식 선임연구위원 02-3299-4234 eshwang@krei.re.kr
자료 문의: 임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2014년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3.8~4.0% 성장이 전망되어 농산물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지만 원화 강세-엔화 약세 현상 심화로 농산물 수출은 불리해질 것으로 보임. 정책당국과 농업인 모두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쌀 관세화 추진, 한·중 FTA, TPP 등 농업부문 시장개방 확대 논의와 함께 국내 보완대책 마련이 중요 정책이슈가 될 것임.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7.3% 이상 성장)과 위안화 강세는 수출 증대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금년에도 농업의 성장 정체와 농가교역조건 악화로 농가소득 문제의 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성장동력 확충과 새로운 활로 모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농촌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가 지속되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6차산업활성화대책의 성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2014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 마련, (2) 농업의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기반 창조농업 발전 토대로서 농산업 R&D 추진체계 개선, (3) 수입축산물과의 경쟁, 지역농업과의 조화, 생활환경의 개선 등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친환경축산기반의 확립, (4) 2013년에 제시된 농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대책의 추진, (5) 식품시장의 확대에 대응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한·중FTA를 활용한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품목의 개발, 생산기반의 구축, (6)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 품질관리, 취약계층 영양공급 확대 등 농식품 분야 소비자정책기반의 구축, (7)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주체들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산업화 전략’ 추진 및 농촌산업 육성, (8) 제3기 삶의질향상계획 수립 등 농촌 삶의 질 향상 대책 마련, (9) 농촌지역 공동체 육성과 연계한 생활권 정비, (10) 농림 분야 국제농업개발협력(ODA) 사업의 양적 확대에 따른 사업의 내실화와 다양한 농림 유관기관 간 유기적 연계협력네트워크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1. 2014년 농정 여건

-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으로 농산물의 내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원·달러(엔) 환율 하락은 농산물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
 - 2014년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3.8~4.0% 성장이 전망되고, 고용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산물의 내수 증가가 전망됨
 - 농산물 수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원화 강세-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어 농업부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이하로 하락하고, 일본 엔화는 달러당 109.9엔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한국은행)
 - 원화 강세-엔화 약세는 농산물 수입 증가와 수출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인데, 특히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 시장에서의 타격이 클 것이므로 환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국, 동남아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쌀 관세화 추진, 한·중FTA, TPP 등 농업부문 시장개방 확대 논의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 정책이슈가 될 것임
 -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연도인 금년에는 최소 시장접근 수입량을 40만 9,000톤에 이르게 되어 쌀 수급에 부담을 주게 될 것임
 - 금년에는 쌀 관세화 이행 관련 2015년 논의와 함께 정책 선택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방안이 중요 정책이슈로 대두될 것임
 - FTA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등과 양자협상을 진행 중이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EC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지역공동체 단위 시장개방 협상에도 참여 선언
 - 한·중FTA에서는 주요 농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하여 개방의 충격을 줄이고,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TPP 협상에서는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협상전략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 필요

- FTA는 개방수준을 높여 농산물 수입 확대의 부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수출 가능성을 높여 새로운 유망품목의 성장 기회로도 작용할 것임.
 - 특히,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7.3% 이상 성장)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위안화 강세는 수출 채산성을 높여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성장의 정체와 농가교역조건 악화로 농가소득 문제 개선 가능성이 낮아 성장동력 확충과 새로운 활로 모색이 과제

- 농업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상승을 앞지르는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2012년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912만 7,000원으로 1994년 이전 수준에 머물렀고, 농가소득은 3,103만 1,000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57.1%까지 하락
- 농가소득 저하 문제가 주요 현안과제로 남아 농업성장동력의 확보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소득보전 및 소득 안정화 대책 필요
 - 정부의 소득보전대책만으로 농가소득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6차산업화전략과 같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생산성 제고와 같은 다양한 대책 필요

□ 이상기후 등으로 생산변동에 따른 농산물 물가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 요구는 더 강해질 것임

- 핵심 농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도매시장 효율화를 위한 정가·수의매매의 확대, 직거래유통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경로 간 경쟁축진으로 유통 효율성을 제고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공급 지원을 확대하는 소비자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 고령화 심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 지속

- 농촌 인구는 2012년 기준 953만 4,000명으로 전국 인구의 18.7%를 차지함.
 - 2000년대 이후 읍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면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귀농·귀촌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농촌에서도 인구 유입량이 유출량을 초과하는 등 사회적 인구 감소 추세는 반전되고 있음
 - 대도시권 및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부에서도 인구 순유입 증가
 - (2012년 기준) 전입 77만 400명 / 전출 76만 8,800명
-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고령인구 비율) ('00) 17.0% → ('05) 22.7% → ('10) 27.0% → ('12) 28.3%
 - 인구 고령화와 자연감소에 따라 농촌의 마을 공동화도 진행될 전망이다 (20호 미만 행정리) ('05) 2,048개(5.7%) → ('10) 3,091개(8.5%)

□ 농촌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 새로운 경제활동의 증가

- 농업 부문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읍·면부의 전체적인 사업체 활동은 증가하는 추세임
 - 농촌에 입지한 사업체 수는 2011년 64만 5,600개로서 2000년 56만 8,700개 대비 13.5%가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34.5% 증가
 - 특히 읍 지역에서는 농림업 및 농특산물 가공·제조업, 유통업 등 농업을 기반으로 6차산업화하기 위한 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경향
 - ('00) 2만 5,300개, 9만 명 ⇒ ('10) 2만 6,200개, 9만 9,700명
- 마을이나 지역 단위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경제활동 주체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회사 등 경제활동 조직(2012년 기준): 도농복합시 평균 6.9개, 군 평균 4.0개 분포

-
-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실현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된 6차산업 활성화 대책이 더욱 구체화됨에 따라 그 성과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산업화는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을 융·복합하는 것으로서 연관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증대를 기대

2.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

(1) 농가소득 안정망 강화

<여건 전망>

- 쌀 관세화 추진, 한·중FTA 추진, TPP 참여 등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빈발과 대규모화에 대비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 마련 요구 증가
 - 특히 한·중FTA의 피해가 채소, 잡곡류, 특용·약용작물 등 밭작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밭농업에 대한 대책이 중요
-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재협상 여부 등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쌀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보완조치 필요

<정책 과제>

- 한·중FTA의 보완대책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제 확충 및 운영 개선
 - 밭농업직불제 대상의 확대, 생산중립적 고정직불제로 개편, 지급단가(현행 1ha당 40만 원)의 상향 조정 등의 개편 방안 모색
- 농작물재해보험공사의 설립(예정)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화
 -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을 효율화하여 보험 가입 확대, 고위험 농가에 대한 인수제한 및 보험료 할증, 공정한 손해평가 등을 통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선의의 계약자 보호
- 가격불안전성이 높은 채소, 과수 등 밭작물에 대해 농작물수입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밭농가의 조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안 검토
 - 쌀에 대해서는 현행 변동직불제를 유지하면서 변동직불제의 사각지대(신규농, 면적·농외소득 초과농 등)를 보완하는 수입보험 도입검토

- 단기적으로 현행 직불제 확충, 재해보험 내실화, 수입보험 도입을 검토 하되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득안정망 구축 필요
 - 장기적인 농가소득안정 정책은 소득보전(다원적 기능 지원), 경영안정(가격위험, 재해위험 관리), 복지대책(고령영세농 지원)으로 체계화

(2) 농업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농산업 R&D 추진체계 개선

<여건 전망>

- 농업의 저성장 추세 극복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과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기반 창조농업의 발전 필요성이 집중될 것임
 - OECD 34개국 중 한국농업의 경쟁력(종합지표)은 2007~2011년 5개년 평균으로 17위 수준(이병훈 등 2013)
- 2013년 수립한 농림식품 과학기술육성 중장기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
 -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 및 에너지문제 해결,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업의 융복합화 등을 위해 R&D 예산을 2022년까지 전체 예산의 10%까지 확대하고, 기술의 사업화율을 2011년 21%에서 2017년 30%까지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책 과제>

- 농림식품과학기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2015년부터 추진)하여 농림식품분야 R&D 청사진을 마련
 - 농림식품 분야 R&D 거버넌스체제 개선,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 등 R&D 시스템 혁신으로 투자효율성 제고
- R&D 투자와 농림식품산업의 연계성을 높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도록 기술실용화 체제 개선
 - 기술평가 체제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 체제 개선 등으로 기술실용화 수준 제고
 - 농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 시스템 구축

- 민간부문의 농림식품 분야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정부의 R&D 투자 확대가 민간부문 자율적 기술개발 역량을 구축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3)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의 확립

<여건 전망>

- 양적 성장을 지속해온 축산업은 2010년 이후 FTA의 추진, 대규모 질병 발생, 악취 등의 환경 부담과 이에 대한 규제 강화, 소비자의 수요변화 등으로 외연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
- 수입축산물과의 경쟁, 지역농업과의 조화, 생활환경의 개선, 친환경·안전 축산물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한 질적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정책 과제>

- 중장기적인 축산물 수급안정,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친환경축산, 환경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으로 전환 필요
-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사육기반 구축
 - 농가 수준별 축종별 다양한 축사표준설계도 마련·보급
 -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 및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 현실화
 - 농가별 자율방역 체계 확립 및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
 - 산지생태축산 시범사업을 통한 산지축산 활성화 및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지원
- 자연 및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부담 최소화 노력
 - 지역별 사육두수 및 분뇨 발생량, 민원발생 등을 고려한 시·군별 가축분뇨자원화 계획 수립 및 가축분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 분뇨자원화 촉진 및 악취관리지침 등을 통한 악취관리 강화
 - 장기적으로 환경부하를 고려한 양분총량제의 단계적 도입·실시

- 친환경축산물 공급활성화 및 유통기반 구축
 - 친환경인증 체계의 정비 및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등 친환경축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확대
- FTA 등 시장개방과 축산물 수급안정, 생산성 제고를 고려한 축산농가의 지원과 구조조정 추진
 - FTA 이행사업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이 낮은 축산농가의 폐업 유도 등 구조조정 추진

(4)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효과 극대화

<여건 전망>

- 2013년의 농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추진력이 요구
 - 도매시장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추진으로 공영도매시장이 소비지 도매물류의 효율화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됨
 - 직거래유통의 활성화 등으로 산지 출하처의 선택 폭이 확대되고 유통경로가 다원화될 전망
-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 요인 상존과 이에 따른 긴급 수급안정대책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정책 과제>

- 농협의 도매사업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생산자단체의 유통계열화로 시장교섭력 제고
 - 농협 도매물류센터와 연계한 규모화된 산지 공동출하조직 및 전속출하조직 육성에 대한 지원 강화
 - 광역 단위 연합마케팅조직 육성과 조합공동사업법인 확대, 영농법인 등 농업법인의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체의 규모화 추진

- 도매유통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속적 추진
 - 정가·수의매매, 선취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법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산지와 도매시장 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중도매인의 규모화 통합자금 지원, 최소거래규모 상향조정, 파렛트 최소출하 단위 및 파렛트 구매 단위 설정, 도매시장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선별적 조속 추진과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시장별 기능 재설정과 시설정비의 차별화

- 직거래 활성화 및 대안적·경쟁적 유통경로 확대
 - 직거래 유형의 다양화와 유형별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과 직거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률(가칭: 직거래활성화법) 제정
 - 농산물 사이버거래소의 거래규모 확대를 위한 거래소 규모화 추진

- 산지조직과 소비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간 직거래 확대를 위한 물류지원
 - 산지 유통조직과 연계한 전통시장 농산물 공급체계 개선과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

(5) 식품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

<여건 전망>

- 식품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식품산업 진흥 정책 부족, 원료 농산물 대외 의존도 심화, 가공식품 관리체계 미흡 문제가 대두될 전망
 - 1인 가구 증가, 건강·편의성 중시 트렌드 확산 등으로 최근 10년간 식품제조업 7%, 외식산업 8%의 연평균 증가율 기록
- 농식품 수출은 엔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대일 수출에 애로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
 - 2008~2012년의 농식품 수출은 연평균 15.7%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원-엔화 환율이 1,300원대에서 1,000원대로 급락하면서 2013년은 전년 대비 1~2% 증가에 그칠 전망
 - 2014년 1달러당 엔화는 현재 수준(106엔, 일본 노무리 증권) 또는 하락(109.9엔, 한국은행)으로 전망되어 엔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봄

<정책 과제>

- 식품시장의 확대 전망에 대응하여 식품산업 진흥 체계 구축, 농업과의 연계 강화, 가공 농식품의 철저한 관리 방안 등 대응책 필요
 -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인 식품, 편의·기능식품 등 성장 잠재력이 큰 품목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수립
 - 식품업체와 산지 간 계약재배나 직거래 확대, 맞춤형 국산 전처리 식재료 공급 증대 등의 방안 마련으로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
 - 가공식품 가운데 단순가공 농식품은 농산물 재배 후 단순가공 단계까지 관리가 미흡하므로 이들 가공 농식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원-엔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물량 확보 곤란 문제 해결 및 수출시장 개척 방안 마련
 -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으로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되, 전량 수출에 따른 리스크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적인 수출물류비 지원, 가격안정보험(기금) 실시 등 정부지원 강화

- 한·중FTA를 활용한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품목의 개발, 생산기반의 구축 등 기본전략 준비
 - 대일 수출의존도 완화 측면에서도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하며, 중국의 고소득층과 안정성 중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프리미엄 농식품·유아용 식품 등의 수출 확대 체계 마련, 유망 수출품목 발굴 후 지원

(6) 농식품 소비자정책의 강화

<여건 전망>

-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환경 변화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 품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소비자 권리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 분야 소비자정책 수요가 빠르게 증가
- 농식품부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총괄 부처로서 2013년 소비과 학정책실 출범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

<정책 과제>

- 소비자 소통채널 확대, 합리적 선택권 강화, 맞춤형 교육×홍보, 식품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한 농식품 안심 소비 기반 조성
 - 소비자 참여형 종합정보망 운영, 농식품 표시제도 개선, 소비자 상시 협력체계 구축
 - 농식품 소비자 교육 대표 브랜드 개설, 활동가 양성 및 콘텐츠 개발
 - 농식품 민원통로 통합, 농식품 피해구제 기준 정비
- 바른 식생활 실천 여건 조성, 취약계층 지원, 우수 농식품과 연계 강화 등을 통한 국민 건강식생활 보장
 - 식생활 지침 공동 기준 마련, 식생활교육 확대, 바른 식생활 캠페인 확산
 - 농촌지역 등 식생활 취약계층 지원기반 마련, 우수 식재료 지원 강화
- 농식품 소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기반 조성
 - 중앙·지자체·민간 기능 확충 및 협의체 운영
 - 농식품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적 근거 확충

(7) 농촌의 산업활성화 및 농업의 6차산업화

<여건 전망>

- 농촌의 경제활동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지속 증가, 사회적 경제 영역의 경제활동도 증가할 전망
 - 국내총생산 대비 농림어업 부가가치 총액 비중은 2.6%로 축소, 농촌 입지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지난 10년간 각각 13.5%, 34.5% 증가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부가가치 높은 경제활동으로 연결하려는 창조 경제 기조 강화

<정책 과제>

-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 농촌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웰빙, 힐링, 전통문화, 친환경 등 소비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활용한 재화와 서비스의 지속적 생산이 가능한 향토산업, 농촌문화산업, 농촌관광 등을 활성화
 - 농촌 주민을 비롯해 귀농·귀촌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인력을 창조적 농촌 기업가로 육성
- 자원 간, 산업 부문 간 융합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산업화 지구’ 등 농촌형 산업지구 조성을 구체화
 - 2014년도부터 추진될 예정인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일자리 확대 및 농식품의 부가가치 증대
 - 지역별로 6차산업을 포함한 농촌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로드맵과 계획하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행
 - 지역 단위에서 산업 간 협력과 융·복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융합형 인재를 양성
- 지역성, 전통성, 향토성, 경제성이 있는 농촌의 자원들을 발굴하고 DB화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
 - 농촌의 자연·생태·문화자원 등을 가치 있는 유산으로 발굴, 등록하고 이를 활용한 농촌관광 산업화, 글로벌화 추진

(8)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여건 전망>

- 농촌의 인구 구성 변화에 따라 복지 수요가 세분화되고 있어 농촌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삶의 질 향상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전에 따른 마을 공동화와 더불어 다문화자녀 및 이주여성 증가, 지속적 도시탈출을 통한 귀농·귀촌 가구 증대 등의 현상으로 농촌의 복지 수요는 다양화, 세분화

<정책 과제>

- 농촌의 고령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수요자의 복지 체감도 향상
 - 공동급식, 공중목욕탕, 공동생활홈 등 일상생활 밀착형 서비스 지원
 - 보건진료소 기능 확충을 통한 농촌노인 건강관리 기능 강화
-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배달체계 구축
 - 농촌의 공간구조상 열악한 대중교통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마을-중심지 간, 서비스 거점 간 이동수단 지원 서비스 다양화
 - 서비스 공급 시설 설치에서 서비스 배달체계 구축으로 지원방식 전환
- 생활 속의 크고 작은 민원을 발굴하여 즉각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복 모니터링단 운영
 - 마을, 읍·면소재지 단위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행복나눔센터(가칭)’를 설치, 의료·복지·문화서비스 거점으로 활용
 - 지역 활동가와 자원봉사자 등이 행복나눔센터를 거점으로 모니터링 및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지원
- 제2기 삶의질향상계획(2010~2014)에 대한 엄정한 성과 평가와 제3기 종합 계획 수립
 - 삶의질향상위원회 활성화 및 사무국 기능 강화로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 마련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부처 간 협업 강화 등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내실화 및 농어촌영향평가 강화

(9) 농촌지역 공동체 육성과 연계한 생활권 정비

<여건 전망>

- 하드웨어시설 투자 위주의 지역개발사업에 공동체 활동을 통합할 필요
 - 주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인 하드웨어시설 투자 위주로 추진된 지역개발사업은 유희시설 양산, 관리·운영 문제 등을 야기
 - 지역공동체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에 맞추어 하드웨어시설과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정책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할 필요

<정책 과제>

- 농촌 주민의 실질적 생활권에 부합하는 공간정책 체계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경제 분야 비(非)물리적 정책을 연계 통합 추진
 - 마을 만들기, 읍·면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등 농촌 지역개발사업 지속 확대
 - 마을과 읍·면 소재지를 포괄하는 생활권 사업 추진 시 로컬푸드 육성, 사회서비스 공급, 주민 역량 강화와 주체 양성 등을 병행 추진
 - 기존 마을 및 읍·면 중심지 대상 사업들이 시설 설치보다는 소프트웨어 활동 위주로 추진되도록 내용 재편
- 소생활권의 경계를 넘어서는 농촌 주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보완
 - 농촌생활권, 도·농연계권 등에 포함된 지자체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생활권 협력사업 추진 지원
- 농촌 지역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체계화
 -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현장포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의 활동이 본 궤도에 오르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 30분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노력
 - 공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농촌 계획제도 정비

(10)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질적 수준 제고

<여건 전망>

- 농림 분야 ODA 사업은 예산의 양적 확대에서 사업의 내실화와 성과 위주의 효율적 사업시행으로 정책방향 전환 필요성 증대
 - 농식품부 예산: ('06) 7억 원 → ('11) 100 → ('13) 128 → ('14) 141
- 다양한 농림 유관기관 간 유기적 연계협력 및 시너지 효과 증대 필요
 - 협업 및 중장기 목표지향적 패키지형 사업의 필요성 증대
 - 농식품부는 중장기 계획인 「국제농업협력사업 발전방안」을 발표(2013)
 - 해외농업 투자 및 개발, 농자재 수출, 구제역 예방 등 주요 농정과제와의 연계 필요
 - 협력 대상국에 대한 자료, 정보 등의 체계적 축적과 우리나라 농정경험 전수를 위한 콘텐츠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

<정책 과제>

- 농림축산 분야 전문성에 입각한 기술협력 등 개발협력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 설정
 - 하드웨어 위주의 중장기 프로젝트형 사업보다는 시범포 건설, 마을 개발, 농업서비스 등 기술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차별성 확보
 - 개도국의 생산성 제고 등 농업부문 성장과 농촌빈곤 감소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추진
- 개발협력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평가를 통해 성과지향적 사업 관리 및 보다 체계화, 효율화된 사업추진과 정책방향 수립
 - 개발협력의 필요성 홍보, 성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로 공감대 형성
- 기관간 협업으로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적 발굴과 추진
 -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의 시범적 공동 추진
 - 정보수집·보급체계 구축과 농정경험의 개도국 적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4년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제76호 해외조립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석현덕, 안선진)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
(정호근, 석현덕)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운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1. 21
발 행 2014. 1. 22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박성재,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한석호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4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536-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